

# “尹, 대통령직 복귀는 대한민국 파멸의 길 내모는 것”

### 민주, 윤 파면 촉구·與 전방위 공세 “만장일치 파면... 석고대죄해야” 李 “국힘, 보수 아닌 극우 정당” 국힘 “탄핵심판 과정서 편향성”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을 하루 앞둔 25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근거

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이 복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쫓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이성 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내란의 전모를 실토하라”며 “내란 동조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의 망상에서 깨어나라. 윤석열은 8:0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근 문형배 현재 소장 권한 대행에 향해 ‘정치 판단을 앞세워 탄핵 심

판 일정을 엉터리로 만들고 있다. 이 후폭풍을 현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협박했다”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계엄 때로 돌아가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재명 당 대표는 “수구를 넘어서 범죄 집단을 지키는 건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극우 정당이다. 극우의 힘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그간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1 라디

오 ‘전격시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의 전례에 비해서도 지금 탄핵심판 절차가 국민들에게 썩 공정하다거나 100% 신뢰를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서원내대변인은 “공판중심주의 원칙도 됐다.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검찰 조서를 증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용될 경우 불복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국민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여든 아든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일단은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또 한번 강조할 것 같다”며 “두 번째는 본인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한 것에 대한 항의도 할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는 아마 국민들에게 끼친 혼란과 불편함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오전에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의 입장에 대해 “정보가 없다.”

변호인단과 당이 교류한 게 없고 내일(25일)도 변호인단과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국힘 김상욱 “尹 탄핵 반대 광주집회 송구”

### 5·18민주묘지 참배...1천송이 헌화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모욕” 비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온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24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계엄 찬성 집회를 강하게 비판, 보수 정당 내 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해당행위(害黨行爲)’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24일 오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헌화하고 있다. 뉴스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역사적 아픔의 현장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인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계엄 찬성 집회가 열려 송구하다”며 “독재에 맞서 시민들이 피 흘리며 항쟁하고 학살이 은폐됐던 곳에서 계엄군을 ‘십자군’이라 표현한 것은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모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보수의 가치 핵심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힘을 다세 피로써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서는 “보수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보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비판할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실행을 해 갈 것인가라는 문제다. 여러 당

이 서로 가치 추구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로의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5·18민주묘지 참배 과정에서 국화 1000여 송이를 가져와 모든 열사들의 묘소에 헌화했다. 헌화에 앞서서는 5·18 희생자들의 영정이 안치된 유영봉안소를 찾아 참배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간 민주묘지를 방문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의 만나 안부인사를 주고받았다.

참배 전 방명록에는 ‘민주주의의 성스러운 수호영령들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지켜갈 것을 다짐하며 마음 올립니다’라고 적었다. 정성현 기자



민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단장인 서영교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태균 씨의 과거 관계에 대해 발언하기에 앞서 사진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與, 상속세 최고세율 안내리면 기초공제 못올린다 행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상속세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하지 못하면 기초공제액 확대에 동의할 수 없는데 행패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서민들이 득을 보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액) 시가로 따지면 60억원 정도가 된다”며 “60억원 이상을 넘게 상속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게 서민인가”라고 지적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그보다 기초공제, 일괄공제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28년 전 10억원이었던 일괄공제 기준이 지금까지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를 내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비인도적이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8억원 정도 되는 집은 상속해서 계속 살게 해주자. 이를 위해 기초공제를 두 배 정도 이내로 올리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며 “그런데 (국민의힘

은) 여기에 왜 판지를 거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서민 운운한다”며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저에게 ‘사기꾼’, ‘인생을 사기로 살았다’고 얘기를 한다. 국민의 삶을 놓고 정책토론을 하자는데 왜 욕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게 집권 여당의 할 짓인가. 이해가 안 된다”라며 “극소수 기득권을 위해 불법·부정·부도덕 행위를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보수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주당, 담양군수 재선거 경선 결선투표 도입

### 5명 참여... 2명 압축될 듯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24일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경선을 결선투표제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결선투표는 예비 후보자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한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한 번 더 투표해서 후보자를 뽑는 방식으로 치른다.

경선 방식과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민주당 담양군수 재선거 경선에는 김용주 전 담양군 경제과장, 김경오 전 담양군 의원, 김종진 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중 전 청와

대 행정관,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5명이 참여한다.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던 최형식 전 담양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윤영덕 전 국회의원도 출마 뜻을 철회하면서 경선은 예측 불허 양상을 보인다.

민주당 후보의 경쟁자로는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정철원 담양군의회의장, 무소속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도전한 김기석 전 담양군의원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진보당 등도 후보자를 공모 중이다.

담양군수 재선거가 포함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는 4월 2일로 예정됐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3월 12일 이전에 인용되면 21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야 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 민주 장경태,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으로 발의

### 3번 부결 후 4번째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일반특검’이 3차례 부결되자 4번째는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추진 가능성을 높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경태(사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대



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에게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코비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의혹 △양평고속도로 중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안’은 지난해 세 차례(9월 19일, 11월 14일, 12월 12일) 최

종 부결된 ‘김건희 일반특검법안’과 달리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에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대통령(현재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만으로도 본회의 가결이 가능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가 변수로 꼽힌다.

실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마약 상설특검법안’과 함께 이르면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 회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